

# 원원, 가능하다고 본다

이승엽 |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 예술경영

단순히 '예술교육의 현장을 필사적으로 사수하기 위해' 설치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예술교육의 현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예술학교와 다른 예술대학이 같이 사는 길의 첫걸음이다.

## 한국예술학교 설치법

나는 소위 '1999년 국립예술대학 파동' 을 모른다. 이 파동은 1999년 가을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국립예술대학 설치법' 을 추진하다가 상당수의 다른 예술대학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사건이다. 당시 공연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나로서는 속사정을 잘 알 수도 없었고 관여할 여지도 별로 없었다. 격렬하게 맞선 양 진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훑어보았을 뿐이다.

학교에 들어와서야 나는 그해 가을의 뜨거웠던 대치를 전설처럼 듣게 되었다. 전략적인 실패라고도 하고 두터운 기득권의 벽을 강제로 학습하였다고도 했다. 옳은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에 의해 강제로 저지당한 분함과 설움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파동을 겪지 않았으니 아는 것도 적지만 그만큼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금년 초에 이상호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45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 서명한 '한국예술학교 설치법' 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1999년에 제출한 것과 기본적으로는 같은 비전을 전제로 한다. 즉 혁신적인 예술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예술학교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적잖은 차이가 있다. 학교의 입장을 내세우면 믿지 못할 수 있으니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국회의 전문위원실 검토자료(국회 관련 인터넷 자료실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다)를 인용하면 이렇다. 이번에 발의된 법은 1999년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들을 상당히 수정하였고 오히려 기존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 과 거의 유사하다.

이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 명시 여부, 학교의 명칭, 부속학교, 조직, 시설 및 교원의 배치 기준 등에서 1999년과 차이가 있다. 즉 '국립' 이나 '대학' 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부속학교를 두지 않는 등 민감한 현안에서 예술학교가 한 발 물러섰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현행 설치법과 다른 점은 학교의 운영을 문화부 장관에게 위탁한 것을 문화부 장관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의 전문사

제도를 석·박사 과정으로 바꾸고 협동과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한 점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 예술가에게 왜 학위가 필요한가?

“……국내 대학들이 대학원 과정은 고사하고 대학 과정들도 충실히 운영하지 못하는 형편에 세계 수준의 대학원을 만들겠다는 제안은 어불성설이라고 학계조차도 반대하였다. 일부 교수들은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사업’이라고까지 혹평하였으며 어떤 경제학자들은 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당시 학생시위로 시달리고 있었던 문교부장관은 새로운 대학원 설립에 절대반대라는 강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렇지 않아도 동요가 심한 대학가에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으며 교수들의 불만만 고조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고급 교육과정의 필요성은 현재 세계적 흐름입니다. 어떠한 타이틀보다는 실력을 중시하는 유럽의 경우도 명칭은 다르지만 박사 과정에 준하는 교육 과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유럽식이 아닌 미국식 학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박사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차이일 뿐이겠지요.

연주자에게 있어서 새로운 레퍼토리의 개척을 위한 공부는 지속적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와 대학원을 합쳐 6년이라는 과정의 공부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연주자의 시각으로 보다 아카데미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박사학위 과정입니다.”

얘기를 좀 돌려서 해보기 위해 두 개의 글을 인용해 보았다. 지금 우리가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언뜻 보면 위의 두 글은 이 법률을 둘러싼 뒷얘기거나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펼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첫 번째 글은 1971년 설치법을 제정하고 대학원 과정을 창립한 한국과학기술원(KIST) 얘기이고, 두 번째 글은 작년 이맘때 나온 음악전문잡지에 실린 글인데 인터뷰를 한 사람은 한 국립대학 음대에서 보직을 맡고 있던 교수의 발언이다.

첫 인용글은 당시 산파역을 맡았었던 정근모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KIST(한국과학기술원)가 한국과학원을 창립할 당시를 회고한 글의 일부다. 그것이 1970년대 초이니 지금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예술학교는 지금 설치법 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흔쾌히 동의하는 것처럼 ‘예술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출범했다.

아무튼 한국과학원의 출범은 그 명분과 필요에도 불구하고 교육 기득권 층으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힌다. ‘대학교육이 망가지고 서울대를 버리는 것’이라던 이 일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그렇지 않았음을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아마 그것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선택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른 선택은 아니었다.

적어도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을 둘러싼 일방적인 세 불리는 위의 사정과 비슷하다. 적지 않은 예술대학이 절대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찬성하지는 않고 있다. 이유도 비슷하다. 설치법 제정을 두고 이것이 우리 예술교육 전체를 망가뜨릴 악법의 전형인 것처럼 보고 ‘정규대

예술학교는 우리 예술교육의 경쟁력과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하나로 건립된, 특화된 학교다. 그보다 20여 년 전에 KAIST가 산업한국의 견인차가 된 것처럼, 이번에 발의된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은 그런 예술학교의 법적 지위를 정상화하려는 법률이다.

학교육의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고 공교육의 파행과 지방대학의 공멸을 불러올 화급한 사태(금년 3월 22일자 소위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 중에서)라는 것이다. 그것이 성명서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지나친 비약이기는 하지만 논리 그 자체는 30년 전과 그리 다르지 않다.

우리 예술교육을 한꺼번에 붕괴시키고 지방대학의 공멸을 불러올 가공할 파괴력을 이 법률안의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 법률 제정을 통해 예술학교가 기존의 대학교육을 붕괴시키고 지방대학의 문을 닫도록 할 정도로 마법의 힘을 획득하게 된다는 말일까? 법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학교의 정원이 늘지 않으며 석·박사 과정도 기존에 운영중인 전문사 과정을 전환하는 것뿐인 데도 왜 이렇게 경악하는 것일까? 좀 거칠게 단순화하면 예술학교가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면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과연 그럴 수 있는가?

두 번째 인용글은 설치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즐겨 묻는 '예술가들에게 왜 학위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대답하고 있다. 그것도 예술학교가 아닌 한 국립대학의 보직 교수의 입을 통해서이다. 음악 분야에서 '연주학 박사' 과정의 필요를 역설하고 있는 그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이미 이 과정을 운영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 대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

다. 적지 않은 국내의 국립 및 사립대학이 대학원에 실기 석·박사 학위과정을 속속 개설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1999년 소위 설치법 파동 당시에 '예술가에게 왜 학위가 필요한가?'라며 핀잔을 주고 예술학교가 운영하고 있던 MFA제도 등 학교 시스템을 폄하하던 이들이 설치법 제정을 저지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막상 자기들의 학교에 이런 과정들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그들의 방식대로 하자면 연주학 박사와 같은 실기 위주의 프로그램은 예술학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일반 대학이 이를 넘보는가 라고 투정을 부려야 할 판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물론 좋은 일이다. 제도와 프로그램에 있어서 기득권이나 특허는 인정할 수 없다. 예술학교가 그 동안 우리 예술교육제도의 개선에 적으나마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는 점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쯤 되면 '예술가에게 왜 학위가 필요한가?'라는 주장은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이미 이 과정들을 운영중인 일반 예술대학들에게 그 화살을 돌리는 것이 순서다.

### 예술학교와 설치법

순서상 좀 늦었지만 한국예술종합학교(보통 예술학교 또는 한예종이라 줄여 부른다)와 이번에 제출된 설치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야 할 것 같다. 예술학교는 1992년에 설립된 국립예술기관이다. 음

악, 연극, 영상, 무용, 미술, 전통예술 등 6개의 원 (일반 대학의 단과 대학에 해당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학교가 문을 연 1990년대는 문화의 패러다임이 한 차례 크게 변동되는 시기다. 문화가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한편 국가 또는 사회의 경쟁력의 못자리이자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문화예술의 측면에서 보면 정치,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 못지 않게 가장 격심한 변화를 겪는 시기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분명하고 첨예하게 드러난다.

예술학교는 우리 예술교육의 경쟁력과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하나로 건립된, 특화된 학교다. 그보다 20여 년 전에 KAIST가 산업한국의 견인차가 된 것처럼.

이번에 발의된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은 그런 예술학교의 법적 지위를 정상화하려는 법률이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 예술학교는 '각종 학교'로 분류된다. '각종 학교'는 정규학교에서 교육시킬 수 없는 간호·미용·양재·속기·타자·편물 등에 관한 특수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직업학교 성격을 가진 학교를 말한다. '예술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범' 했다는 예술학교가 '각종 학교'로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위는 생략한다. 문제는 '각종 학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을 갖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타 대학과 공동학위제를 운영하거나 협동과정부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는 예술학교에게 매우 뼈아픈 부분이다. 심화 교육과 통합 교육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4년의 학부 과정으로 예술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장르간의 교류와 융합은 시대의 트렌드이며 국내외의 자원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무척 자연스

러운 일이다. 예술학교가 마음이 바빠지는 것은 특히 이 때문이다.

예술학교는 이미 개교 당시부터 대학원에 상당하는 '전문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즉 예술계와 예술교육계와 합의된 사항이다). 이 과정은 2년 또는 3년 과정으로 많게는 일반대학의 2.5배에 이르는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집중 심화 코스다. 이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에 상당하는 학력을 인정하는 전문사' 증서가 주어진다. 이들에게 석사학위(아마도 실기석사 정도가 될 것이다)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법이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격과 여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기존의 정원 내에서 일부 박사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석·박사학위가 감투가 되는 시대는 이미 아니다. 호환이 되는 인증(운전면허증 같은 것이라도나 할까)을 해달라는 것이다. 공동학위제와 같은 협업을 위한 예술학교의 노력이 '각종 학교'이기 때문에 아예 원천 봉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어야 한다.

### 결국 문제는?

예술학교의 운영이나 교육체계가 선진적이며 우리 현실에서 필요한 학교라는 점은 설치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인정한다. 지난 4월, 설치법 공방 중 열린 국회 공청회에 나온 반대측 발제자도

“실기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일반 대학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밀도가 있는 학교”이며 “학생 선발과 커리큘럼 운영에 있어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는 “예술학교와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예술가를 양성하는 것은 포기했다”고 말할 정도다. 예술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과 수준은 학위 문제를 뛰어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이번 갈등의 원인은 위기감과 불신이라고 본다. 예술교육을 둘러싼 위기상황은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전반적인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대학을 소용돌이치게 하고 있다. 대학통합과 구조조정, 가파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학생 미달 사태는 학교나 학과의 존폐까지 고민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사정이 나아 보이는 예술학교를 또 밀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예술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만큼 정부나 국가는 예술교육 전반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보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그러나 예술학교를 앞서 달리게 하고 싶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예술교육의 획기적 향상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정서적 박탈감’이라는 말이 설치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좀 거칠게 말하자면 ‘특혜’ 시비다.

이런 위기와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예술학교 설치법에 대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첫째는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일반 예술대학교육의 처지를 봐서라도 예술학교가 더 나아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태도다. 지금까지 보인 반대쪽의 입장은 대충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예술학교는 예술학교 식으로 지원하고 그런 한편 전체 예술교육이 살길을 적극

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물론 나는 후자가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이번에도 설치법을 반대하고 저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로부터 얻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의 예술교육의 위기는 예술학교 때문이 아니다. 예술교육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환경의 변화가 상승작용을 일으켰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낀 탓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법안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전체 예술교육이 사는 길을 찾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방안이다. 일반 대학들이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체계에 차이가 있고 보조를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예술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공동으로 찾아야 한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예술교육지원법안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설치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예술교육의 현장을 필사적으로 사수하기 위해’ (위의 성명서 중에서) 설치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예술교육의 현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예술학교와 다른 예술대학이 같이 사는 길의 첫걸음이다.

예술학교 설치법은 다른 학교를 공멸시킬 마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도 하지만 다른 학교와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출 방법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술학교가 다른 학교를 눌러서 그 피의 대가로 홀로 우월적 지위에 오르겠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다는 사실은 밝혀두고 싶다. 이번 설치법안을 반대하는 쪽이 이런 사실만이라도 이해한다면 윈윈의 길이 영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